디자인비엔날레 48일 일정 폐막

'더할 나위 없는-The Clue'라는 주제로 48일간 진행됐던 제3회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폐막식이 4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렸다.

/위직량기자 jrwi@

■ 신종플루 재난대책본부 가동 첫 날

진료 매뉴얼 없어 보건소~병원 오락가락

정부 구체적 지침 없어 시·도 대책본부 구성 못해

정부가 4일 범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발족해 신종인플루엔자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의료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광주시·전남도 등 자치단체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4일부터 가동하도록 지시했지만,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아 아직 본부가 꾸려지지 못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나서고 싶어도 신종플루 같은 사회적 질병에 대처했던 사례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4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시·도에 공문을 내려보내 이날부터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재난안전본부를 가동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작 대책본부 구성과 활동 범위,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아 시·도는 이날 현재까지 본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행정안전부에서 '신종플루 관리대책과 관련한 시·도관계관회의'를 가진 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인원, 지위, 역할 등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빨라야 5일 오후께 시·도 대책본부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재난대책본부 구성을 위해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본부를 어떻게 구성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당혹스럽다"며 "그러나 신종플루 대책은 해당 실국에서 종전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종 플루 대응체계에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감기약 복용하고 다시 와라" 학생들 진료절차 우왕좌왕

신종 플루 학생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감염 진단 절차가 오락가락하면서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같은 반에서 세 명의 동료가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모 고교 2년 이모(17)군은 4일 등교 직전 발열(發熱) 증세를 보여 광주 A의원을 찾았다. 의사는 이군에게 이틀분의 감기약을 처방했다.

약을 복용한 뒤 등교한 이군은 좀처럼 열이 내려가지 않자 담임 교사 B씨를 찾아갔다. B교사는 이군에게 "보건소에서 신종플루 여부를 검사해본 뒤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다. 이군은 곧장 북구보건소를 찾았으나 의사는 몇가지 물어보더니 "감기약을 복용해본 뒤 다시 오라"는 대답뿐이었다.

이군은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B교사는 거듭 확실한 진단을 받아올 것을 주문했다. 어쩔 수 없이 거점 병원인 광주 C종합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간이 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의원-학교-보건소-병원을 오가며 6시간을 허비한 뒤였다. 하지만 간이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의사의 말에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다. 신종플루 진단을 둘러싼 의료현장의 혼란이 커지면서 이처럼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진료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확진 검사 없이도 개인 병·의원의 타미플루 처방이 가능해졌지만 남발로 인한 내성과 부작용 등을 우려 이를 꺼리는 의사들이 많아 개인 병·의원을 찾은 환자들이 거점병원을 다시 찾아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15만원 확진비 너무 비싸" 진료 회피…전염 더욱 확산

지난 3일 초등학생인 아들을 데리고 광주지역 대학병원을 찾은 A씨는 진료비계산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접수 이후 체온을 재고, 간이검사를 했으며 확진검사는 5일 정도 지나야 알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기까지 총 5분 정도 걸렸을 뿐인데 진료비계산서에는 외래부담금·간이검사·확진검사 포함 총 14만6천원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신종플루 진료 및 검사 비용이 부담돼 검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신종플루 진료·검사비는 대학병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15만원에 가까워 감염자가 발생한 가족(4인 기준)의 경우, 모두가 검사를 받으려면 총 60만원의 고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환자들에게도 일정부분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종플루 검사는 1차 간이검사(또는 응급검사)와 2차 확진 검사로 나뉜다. 간이검사는 1만8천원, 확진 검사는 11만2천원(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기준) 가량이다. 여기에 진료비를 포함할 경우 확진검사까지 총 14만6천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 같이 비싼 확진검사비 때문에 비용이 저렴한 간이검사만을 택하는 환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검사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환자들도 상당수다. 특히 대다수가 간이검사를 택하고 있으나 이 검사의 확진율은 60%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간이검사 결과에만 의존할 경우 조기 진단 및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도 쌀값 대책 미흡하다"

도의원 단식…농민 야적시위 확산

전남도가 쌀값 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내놓은 '쌀 수급안정 종합 대책'에 대한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민노당 소속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데에 이어 민주당 소속 도의원 2명도 단식에 합류했고, 전남지역 농민단체는 야적시위까지 계획하고 있어 전남도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김창남(장흥), 송범근(담양)의원은 4일 오후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대북 쌀 지원을 요청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조례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전남도가 소극적"이라며 "이 것을 활용해서라도 쌀을 북에 보내 재고 쌀을 줄여 쌀 수급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다른 도의원들도 이들의 의견에 동조해 조만간 단식농성에 동참할 뜻을 밝혀 단식농성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민노당 소속 정우태(장흥), 고송자(비례)의원은 지난 3일부터 전남도에 쌀 직접매입을 요구하며 이틀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도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자체 매입을 한다고 했으면서 말을 바꿨다"며 "RPC가 쌀을 사들이는 매입자금의 이자 1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무슨 쌀 수급안정대책이냐?"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원들의 잇따른 단식농성에 이어 지역 농민단체들도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쌀값 문제가 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로 '불똥'이 튀는 형국이 되고 있다.

한농연 전남도연합회는 오는 9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쌀값 폭락에 항의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벼 야적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전농도 오는 11일부터 전국투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쌀값 폭락에 따른 전남도의 쌀 수급안정화 대책을 놓고 파문이 확산하자 전남도는 이에 대해 적극 해명을 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RPC를 통해 햅쌀을 매입하는 '자체매입'을 추진, 농가에서 쌀값 하락을 우려해 투매하는 현상을 막기로 했지만, 이것이 지자체가 직접 쌀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바람에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쌀 대북지원 문제도 정부 정책과 얽혀있는 만큼 지자체가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입장이어서 도의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곡정책은 중앙정부의 몫으로 지자체가 쌀을 직접 매입해 격리시킬 수 없다"면서 "이번 대책이 충분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열악한 전남도 재정상태에서 가용예산을 전액 투입하는 만큼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전북도의 자체 쌀 매입과 관련해서도 "전북도에 확인한 결과 전북의 경우도 자체 수매 격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고미가 아닌 올해 쌀을 RPC에서 매입하도록 매입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자체 수매'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2011년 국비 확보 잰걸음

2조5천억 목표…실·국별 태스크포스팀 구성

광주시가 2011년도 국비 목표액 2조5천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조기 가동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성장동력사업과 R&D, 환경·복지관련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2011년 국비를 대폭 확보하기 위해 실·국별로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내년 초부터 기획재정부 등 해당 정부 부처를 상대로 국비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일께 시 본청과 자치구 예산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2011년 국비확보 마인드 제고와 전략 모색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2011년도 목표치를 달성하고 나서 2012년도 국비 3조원 시대를 열어간다는 방침이다.

2011년도 예산을 확보하고자 태스크포스 등을 구성하는 것은 박광태 광주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한 발짝 앞선 행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원건 예산담당관은 "광주의 미래인 광산업과 첨단부품산업, 신에너지산업 등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기에 예산확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재정 조기집행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인센티브 10억원과 함께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